

헤이그법정 '일본군 위안부 유죄판결'을 보고...



지난 3일 헤이그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최종판결에서 남·북한, 대만,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서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백합꽃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정대협 제공

여성 힘으로 내린 정의의 심판 일 정부와의 싸움 이제부터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최종판결(〈한겨레〉 6일치 2면)에 다녀왔다.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2000년 법정'에서 기소한 내용에 대해 1년 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최종판결을 듣는 법정이었다. 특히 전유고 전범 국제법정이 열렸고, 평화공전과 이준열사기념관이 있으며,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자리잡게 될 평화의 도시 헤이그에서 이런 중요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일본의 위안소 운영이 이제 성노예제로 세계에 공인되고 국제적인 범죄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느껴졌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단이 주로 적용한 법은 인도에 반한 죄로서의 강간과 성노예에 관한 국제법이었다. 개인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법정은 2차대전 때 많은 아시아 여성들이 일본군에 성노예로 끌려갔고 강간당했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시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왕' 히로히토를 포함하여 기소된 10인 전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국가 책임과 관련하여 법정은 당시 일본의 군대와 정부 관료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 이후 사실의 은폐, 부인, 왜곡과 책임자 기소 처벌 회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회피, 재발 방지 회피 등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국제 민간법정의 판결로서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성노예제와 강간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일본을, 양심과 도덕의 힘으로 온 세계에 전범으로 공식 선포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배상을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의 잘못을 만천하에 밝히는 것이야말로 여성 시민법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목

표이자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런 민간법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아시아 여성연대의 노력과 피해자 생존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이 법정이 끝났다고 해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또는 새로이 시작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그 중 우선, 2000년 법정의 판결이 현실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중요하다. 판결문에서도 이를 위해 유엔과 모든 나라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판결 후에 있었던 '정의와 책임' 국제회의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올라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비슷한 국제범죄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국제연대의 강화와 국제법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판결 뒤에 열린 국제회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된 주제였다. 강간, 강제매춘 등 여성에 대한 범죄가 주요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여성에 대한 범죄는 국제적으로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안에는 139개국이 서명했고, 47개국이 관련법을 인준했다. 60개국이 인준하면 발효하게 되는데 앞

으로 두세달 안에 이뤄지리라 예측된다.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정대협 병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이사